

이재용·최태원 등 재계총수 총출동... '체코 원전' 지원사격

尹 내달 체코 방문에 동행

국내 기업들이 한국과 체코의 경제 동맹 강화에 힘을 신는다.

국내 산업계는 총 3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섬과 동시에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원전 협력 방문에 국내 재계 그룹 총수가 총출동해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협업은 물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는 모양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는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대신해 장재훈 사장이 동행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삼성 이재용, 배터리 등 신사업 기회 체코 인접국 사업장 점검 등 전망 현대 정의선 대신 장재훈 출장길 원전 지원, 현지공장 점검 나설 듯 LG 구광모, 2차전지 공장 논의 예상 포스코 장인화 '패싱' 논란 잠재워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총수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참석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은 체코에 직접 생산 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체코가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만큼 신사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전망이

다. 또 이 회장은 이번 출장길에서 체코 인접국의 사업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을 수도 있다.

정의선 회장을 대신해 체코 출장길에 나선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원전 건설 사업 지원과 함께 현지 공장 점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체코법인은 현대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의 생산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으며 생산능력은 33만대다.

구광모 LG 회장도 체코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구 회장은 체코 정부와 2차전지 공장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공장에 대한 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체코는 2030년까지 전기차 최대 50만대 보급을 내세우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해 왔다.

이번 총수들의 방문에서 눈길을 끄는 기업은 포스코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올 6월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동행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장인화 회장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또 다시 동행하면서 한동안 지속됐던 '포스코 패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체코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의 신사업 키워드는 무엇일지도 주목된다. 원전 수주의 주역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소속된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 역시 동행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체코와 경제협력 범위 확장이 목적이다. 앞서 양국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 중공업 등 민관 합동팀이 최근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원전 외에도 첨단산업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DB손해보험

안전하기로, 건강하기로, 사랑하기로
약속하길 잘했다!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범인증제도 10월 조기시행

당정, 고위관계자회의 배추·사과 등 성수품 17만톤 공급 소상공인 명절자금 40조 신규지원

당정이 25일 추석 물가 관리에 대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등을 논의했다.

당은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성수품 대규모·할인 공급과 함께 금년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전년 대비 5% 이상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앙·지자체의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더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3.4~3.5%)를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당정은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내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한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로,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리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